

## 성동구, 1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국기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돋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을 신설하고 월 5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현행법상 유족 승계 규정이 없어, 유공자가 사망하면 남겨진 배우자는 지원이 중단되는 등 보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수당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다.

다만, 성동구 보호예우수당을 이미 받고 있거나 재후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통장사본, 참전유공자 증명서류(참전 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 등)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오늘의 대한 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와 그 결을 지켜온 가족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협당한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는 첫가게! 마포구 '청년상인 반년살이' 개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월 5일 레드로드에서 청년이 실제 상권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창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획한 '청년상인 반년살이' 5개 소의 개점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청년상인 반년살이'는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레드로드 R5 일대에 창업 체험형 점포(75m<sup>2</sup> 규모)를 제공하고,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연계 지원해 청년 상인의 역량을 높이는 사업이다.

구는 이를 통해 청년들이 창업 초기 실패 부담을 덜고 창업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자 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총 5개 팀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은 ▲한국 전통 도자기·자개 공예품 ▲레드로드 캐릭터 굿즈 ▲한지 공예 소품 ▲사진 기반 디자인 굿즈 ▲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K-푸드 등 관광과 지역 특색을 살린 상품을 선보인다.

'청년살이 반년살이'는 6개월 단위로 운영되며, 판매 품목은 한국적 특색을 담은 공예품과 기념품, 관광형 상품 및 체험 콘텐츠로 구성된다. 참여 청년은 주 6일(화요일~일요일), 13시~21시까지 점포를 필수 운영해야 하며, 점포 사용료는 월 22만 원(판매비 및 부가세 포함)이다.

구는 본 사업을 단기 운영에 그치지 않고 지속 추진해, 향후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진출할 수 있는 청년 창업 인재를 꾸준히 발굴·육성하는 마포형 청년 상권 정책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청년상인 반년살이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청년의 아이디어가 시장과 만나고 도전이 경험이로, 경험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라며, "오늘 문을 여는 청년상점 하나하나가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하고, 또 다른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생애 첫 집 계약 대비…영등포구, 고3 예비졸업생 대상 부동산 교육

중랑구(구청장 류경기) 환경교육센터에서 운영 중인 '기후위기와 식량난: 지구요리사'와 '화학물질과 환경보건' 프로그램이 환경부 '2025년 3회차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신규 지정됐다.

구는 환경부 인증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며 생활 밀착형 환경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우수환경교육 지정제는 환경부가 프로그램의 친환경성, 교육적 우수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정하는 국가지정 제도다.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될 경우 「환경교육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 발급과 현판 및 부착물 등이 지원돼 공신력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식 인증을 받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두 프로그램은 2028년까지 인증이 유지된다.

이번 지정으로 중랑구 환경교육센터는 2024년 인증받은 '미니미니립 대소동', 2023년 인증받은 '모여라! 중랑구 동물친구들', '기후위기요원의 숨겨진 비밀'에 이어 총 5건의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하게 됐다.

'기후위기와 식량난: 지구요리사'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식량 문제의 연관성을 이해하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보드게임 '초록 요리사'와 채식 레시피 기획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전환에 대한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은 지역의 일상과 밀접한 주제를 환경교육으로 풀어낸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먹거리, 환경보건 등 주민의 삶과 맞닿은 환경 이슈를 실천 중심의 교육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도내·마력 특별사업으로 서울 곳곳이 18만 4000㎡ 신혼설립으로 가득해집니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미리  
내집**

서울 곳곳이  
18만 4000㎡ 신혼설립으로  
가득해집니다



서울시가 구해주는 신혼집, 미리내집 |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 II)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하는 신혼부부의 주거인정을 위해 부담없는 전세가로 주택을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현대차 GBC 추가협상 완료… 105층 1개동→49층 3개동 변경

'31년 말 준공 목표, 글로벌 비즈니스·문화 중심지 조성… 105층 1개동→49층 3개동'

공공기여 1조 9,827억 원으로 증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생활 인프라에 투입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7만 9,341㎡)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사업이 2031년 준공 목표로 다시 시동을 건다.

49층 타워 3개동에는 오피스와 호텔을 비롯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전시장 등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고, 타워동 최상층부에는 한강과 도심이 내려다보이는 전망 공간을 설치한다.

타워 사이에는 서울광장 2배 규모 녹지도 조성해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문화 중심지'로 새롭게 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의 변경 계약으로 시작된 GBC 사업 추가협상을 지난해 12월 30일(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공기여 총액 증액(약 1조 9,827억 원)과 일부 교통개선대책 추가 부담도 합의해 시민공간과 편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타워동 최상층부에는 전망 공간을 설

치해 시민들이 한강·탄천·강남 도심을 비롯한 서울의 주요 명소들을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도록 계획했다.

GBC 중앙에는 영동대로와 지상광장을 연결하는 1만 4000㎡의 대규모 도심 숲도 들어선다. 민간개발 복합단지 내 녹지공간 중 국내 최대 규모로 서울광장보다 크다. 영동대로 상부 지상광장과 합하면 강남 도심권에 서울광장 2배 규모의 시민 녹지공간이 확보되는 셈이다.

시와 현대차그룹은 당초 계획했던 특정지정용도 이행 곤란에 따라 공공기여 총액을 약 1조 9827억원으로 증액하는 데도 합의했다. 공공기여 제공과는 별개로 현대차그룹은 전시장, 공연장, 전망공간 등 공공시설을 규모 있게 건립을 계획했다"며 "장기간 표류한 GBC 개발을 신속 추진해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성 기자

##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피해 보상 신속 추진

인적·물적 피해보상 위해 보험·기금·국가배상 절차 등 가용 가능한 수단 총동원할 것

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중앙지사하고 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 보험·재난관리기금·국가배상 절차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사조위 조사결과 보고서를 12월 30일 서울시로 공식 통보했다.

시가 통보받은 사조위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은 불연속면과 쇄기형 토체로 분석됐다. 간접적 원인으로는 지하수위 저하, 하수관

누수,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사 결과와 향후 보상 절차 등을 안내하고, 보험·기금·법적 절차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활용해 보상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한 피해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사망자와 부상자 등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기입한 영조몰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서는

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 원을 이미 지급한 바 있다.

보험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수개월 내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관련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랫동안 조사 결과를 기다려온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제도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 실시…불균형 해소 지속 노력

공시지가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 자체 실시…불균형 해소 지속 노력

GIS 기반 '공시지가 검증지원시스템' 구축…공시지가 검증 역량 체계적 확보

서울시는 올해 공시지가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해당 조사는 2022년부터 공시지가의 지역 간·용도 간 가격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결과는 자치구 담당자와 관할 감정평가사에게 제공돼 공시지가 조사·산정 과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자동가치산정모형(AVM, Automated Valuation Model)을 활용한 시장가치 추정 결과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25개 자치구의 법정동 및 국가기초구역 단위 공시지가 가격 수준과 균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했다.

시는 '공시지가 검증지원시스템'도 자체 구축해 ▲사전분석(토지 특성·변동률 등) ▲시장분석(권역·용도별 가격 균형성) ▲민원현황(의견제출·이의신청) 등 공시지가 균형성 분석 결과를 축적·관리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GIS(공간정보시스템) 기반 분석 기능을 통해 공시 업무 담당자가 데이터에 기반한 공시지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GIS(공간정보시스템)는 데이터를 지도 위에 시각화해 제공하는 분석 도구로, 인접 필지와의 가격 수준 및 균형성 등을 한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와 조사·산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시·도 공시지가 검증지원센터' 도입에 대비해 자체 검증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0월 30일, 전국 9개 시·도와 함께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공시지가 검증지원센터'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치체 참여를 통한 공시지가의 신뢰성·정확성 제고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시지가는 보유세와 기초생활보장 등 시민 생활에 매우 밀접하다"며, "서울시는 공적 기준가격인 공시지가의 균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장성 기자